

## 成長을 통한 再分配와 基本生活要件의 充足 —開發戰略의 새로운 轉換點을 찾아서—

朱 鶴 中

### ▷ 目 次 ◇

- I. 새 開發戰略의 背景
- II. 成長을 통한 再分配의 開發戰略
- III. 開發戰略으로서 基本生活要件의 充足
- IV. 우리에게 주는 教訓

### I. 새 開發戰略의 背景

應用經濟學의 瓠兒로서 각광을 받아온 經濟發展論은 20餘年間에 걸친 理論의 進化와 應用을 거친 오늘날 아직도 混迷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70年代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突破口를 찾으려는 陣痛을 겪고 있다. 經濟發展論

筆者：韓國開發研究院 首席研究員

1) 여러 學者에 의하여 널리 이용되는 學說의 原型은 新古典學派로서 「존슨」(Harry G. Johnson)과 「바그와티」(Jagdish Bhagwati), 構造論者로서 「체너리」(Hollis Chenery), 「무르달」(Gunnar Myrdal), 「시어즈」(Dudley Sears), 相互依存論者로서 「바란」(Paul Baran), 「후랭크」(Gunder Frank) 등에 의하여 발전된 것이 그 代表의이다.

이 이러한 學問的 混亂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배경은 社會科學으로서 또한 政策科學으로서 經濟發展論이 이룬 20餘年間의 實績을 再評價하는 데에서 비롯한다. 오늘날까지 經濟發展論은 理論的인 通說이 定立되어 있지 않고 發展과 成長의 分明한 區分이 없는 經濟成長論이 그主流를 이루고 있으며, 그나마 新古典學派(the neo-classicals), 構造論者(the structuralists), 相互依存論者(the dominancy/dependence school)의 原型을 부분적인 問題에 대하여 便法的으로 援用하는 데 불과하다<sup>1)</sup>. 經濟發展의 一般理論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經濟成長論에서 제시되는 여러 模型의 쳐방이豫想하는 政策效果를 거두고 開發途上國의 經濟成長과 發展問題를 해결하는 데 괄목할 만한 寄與가 實證的으로 제시되었다면 불완전한 理論이나마 그 有用性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20餘年間 世界 여러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成長과 發展의 經驗은 理論의 불완전성을 容納하기에는 성공이 예외적이라고 할 정도로

失敗의 事例가 많았다.

世界銀行의 「학」(Mahbub ul Hag)은 開發戰略이 危機에 직면한 論據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M. ul Hag, 1973, p. 29). 첫째, 成長率로서 나타난 20年間의 開發途上國의 發展成果를 再吟味하여 보면 人類의 3분의 2나 되는 대다수 開發途上國의 1人當所得이 年間 블과 1弗씩 밖에 增加하지 않았고, 둘째, 그나마 작은 所得增加가 블평등하게 分配되어 一國의 40%의 低所得階層은 비참한 수준의 生存 問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계층의 所得은 경우에 따라 20年前의 所得水準에도 미달된다는 것이다. 세째, 發展의 성공적인 事例였던 파키스탄과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가 「發展의 낭패」(development disasters)로 전락하였고, 네째, 오늘날의 많은 後進國들은 「發展에 대한 권태증」(development weariness)에 걸려 보다 근본적인 經濟的 社會的 치유를 갈구하는 한편 先進國은 「外援에 대한 권태증」(aid weariness)에 걸려 그 나마 형식적이던 經濟協力を 終熄하려는 傾向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이러한 가운데 오늘날까지 成長을 神聖視해 왔고 成長의 福音을 世界에 전해오던 先進國의 學者가 零의 成長을 주장하게 되어 成長을 위한 成長의 병폐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反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2)</sup>.

學界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일련의 반성과

2) 물론 「학」이 지적하였듯이 開發途上國으로서도 잘못이 없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1人當所得이라는 마력적 숫자를 千弗線까지 맹목적으로 추적하면 先進國의 낙원과 같은 生活水準이 보장된다든지, 일반적으로 混合經濟體制를 채택하여 자본주의와 社會主義의 長點을 살릴 수 있다고 과信하였다든지 또는 선진국의 충분한 계속적인 援助와 경제협력을 기대하였다든지 하는 것 등이 개발도상국들의 代表의인 잘못된 전제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작성은 經濟開發戰略의 再定立이라는 命題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오늘날까지 1970年代를 전후하여 「成長을 통한 再分配」(redistribution with growth)과 70年代 중반에 「基本生活要件의 充足」(meeting basic needs)이라는 두 가지 接近이 새로운 開發戰略으로 浮刻되고 있다. 이 小考를 통하여 위의 두 가지 새로운 開發戰略의 要旨를 概觀하고 그 意義를 吟味함으로써 第4次 5個年計劃期間에 社會開發의 基盤을 공고히 하고 그 本格化를 構想하는 第5次 5個年計劃의 立案에 즈음하여 他山之石의 教訓을 삼고자 한다.

## II. 成長을 통한 再分配의 開發戰略

開發途上國의 問題로서 貧困과 分配의 問題가 經濟發展에 관한 文獻에 지적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바그와티」는 그의 後進國經濟論에서 “開發途上國의 냉혹한 현실은 단순한 貧困이 아니라 不平等한 所得의 分布”라고 지적하였다(Jagdish Bhagwati, 1966, pp. 20~21). 「체너리」도 經濟發展論에 있어서 충분한 論議가 없었던 두 分野로서 技術變化와 所得分配를 들고 “政策處方에 있어서 經濟學者の 역할을 生產量의 극대에 한정하였고 所得分配와 技術의 問題는 政治家와 工業者의 손에 放任하여 왔다”(H. Chenery, ed., 1971, p. 10)고 經濟發展論의 취약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分配問題의 認識이 後述한 바와 같이 本格的인 分配問題에 관한 研究로 발전되기까지는 어떤 契機가 있어야 하는바 이를 이론

것이 60年代 開發途上國 經濟成長의 世界的模範國이었던 파키스탄과 나이지리아의 비참한 「發展의 狼狽」(development disasters)였다<sup>3)</sup>.

60年代에 있어서 個人的 創意와 政府의 政策介入의 理想的 結合이라고 禮讚되었던(Papanek, 1967, p. ix) 파키스탄의 模範的 持續成長이 극적으로 空中分解하게 된 中요한 이유를 「허쉬만」은 經濟發展過程에 있어서 所得不平等에 대한 容認度의 變化에서 오는 政治的·經濟的·社會的 不安의 結果라고 主張한다(A.O. Hirschman, 1973). 「허쉬만」의 主張과 같이 「터널」效果(tunnel effect)가 모범적인 經濟成長을 發展의 狼狽로 变질시키는 영향력을 지녔다고 한다면 成長과 衡平의 조화는 經濟發展의 한 菲요 충분조건이 된다. 이러한 條件을 充足시키고 自衛的手段을 강구하기 위하여 1970年代初에 所得分配와 再分配에 관한 研究가 學界의 커다란 관심사가 되었다.

70年代初를 전후하여 오늘날까지 所得分配와 再分配에 관한 대표적인 政策的 研究는 世界銀行과 「써섹스」大學校의 共同研究인 『成長을 통한 再分配』(Redistribution with Growth), 「아델만」과 「모리스」의 『開發途上國의 經濟成長과 社會的 衡平』(Economic Growth and Social Equity in Developing Countries) 그리고 國際勞動機構의 『雇傭, 成長 및 基本生活要件』(Employment, Growth and Basic

Needs) 등이 있다. 물론 이期間에 所得分配研究에 관한 여러가지 寄與가 많이 있었으나<sup>4)</sup> 여기서는 開發戰略과 緊密적 관係이 있는 위의 세 가지 政策的研究들을 중심으로 成長과 分配의 關係 및 衡平造成的 政策處方과 그限界를 吟味하여 보기로 한다.

## 1. 成長과 分配와의 關係

成長과 分配와의 關係에 대한 分析的 結論은 일반적으로 樂觀할 수 없다는 것이 定說이다. 世界銀行과 「써섹스」大學校의 共同研究에 의하면 世界各國에 있어서 10餘年間의 高度成長은 全國民의 3分의 1에 해당하는 階層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작다는 것이다(Chenery, p. xiii). 이와 같은 結論을 뒷받침할 수 있는 實證的 根據는 基礎資料의 問題로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불충분한 것인지만 世界銀行 「써섹스」大學校 共同研究에 제시된 國際比較資料에 의하면 高度成長이 所得不平等을 改善한다는 確證的 根據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Chenery, et al. pp. 15~16). 「아델만」과 「모리스」의 結論은 더욱 비관적인 것으로 “成長은 極貧者의 절대적 및 상대적 平均所得의 低下를 초래하였다”(Adelman & Morris, p. 189)고 한다. 이러한 「아델만」과 「모리스」의 悲觀的 結論은 그들이 援用한 分析方法과 實證資料의 根據에 대하여 적지 않은 批判을 받고 있다(Lal, pp. 728~730).

「아델만」과 「모리스」는 貧困과 不平等의 決定要因으로 發展初期의 「인플레」, 人口增加, 技術變化, 傳統的 部門의 商業化, 都市化 등을 들고 있으며(Adelman & Morris, p. 183), 世界銀行과 「써섹스」大學校의 共同研究에서는

3) 貧困과 分配의 문제는 開發途上國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先進國에 있어서의 時代的 背景에 대하여는 「랄」(Deepak Lal)의 論文,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A Review Article”, *World Development*, Vol. 4, No. 9, 1976, pp. 725~727 참조.

4) 그 代表的인 것은 「앳킨슨」(Anthony B. Atkinson), 「브라인더」(A.S. Blinder), 「미드」(James E. Meade), 「坦比根」(Jan Tinbergen), 「와일즈」(P. Wiles), 「클라인」(W.R. Cline) 등이다.

零細農, 農業勞動者, 零細自營業者, 都市非正規部門의 就業者 등이 貧困階層에 포함되며 그 원인으로는 資產所有의 集中과 資本, 特히 人的資本 形成機會의 制約을 들고 있다. 前者は 經濟社會의 發展過程에서 작용하는 變化要因을 여러 分野를 포괄하여 크게 본 반면에 後者는 經濟的 要因을 구체적으로 규명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分析的 결과는 分配와 貧困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 하며(Lal, p. 730), 成長과 分配와의 관계를 理論的 實證的으로 규명하는 것이 오늘날 經濟學徒가 당면한 커다란 課題중의 하나이다.

## 2. 제시된 政策的 處方

衡平과 分配에 관한 政策展開는 어떤 倫理的 規範과 現實的 制約을 전제하고, 이에 따라 政策目標를 제시하는 것이 通常의이나 世界銀行과 「씨섹스」大學校의 公동연구는 前者에 대한 規範的인 論議가 없이 後者만을 論議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研究는 經濟成長率뿐만 아니라 分配上 加重值(distributional weights)로서 所得增大에 따른 分配形態別 開發目標의 設定과 성과의 測定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Chenery, et al., p. 39). 한편 國際勞動機構는 世界 모든 나라가 今世紀末까지 제시된 最低生活水準에 到達할 수 있는 戰略을 제시하고 있다(ILO, 1976, p. 14). 이러한 便法的 接近은 展開될 政策의 초점을 貧困 또는 衡平에 두어야 하느냐의 選擇 또는 兩立의 問題와 國際間의 所得과 富의 再分配를 度外視하고 다만 國內問題로서 국한시킨 일반적 政策手段의 倫理的 根據가 正當性이 있느냐의 問題를 內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限定的 政策目標를前提로 하여 文獻에 제시된 政策處方을 檢討하기로 하고前述한 문제점들에 관해서는 여기서 論議의 對象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文獻에 나타난 世界銀行-「씨섹스」大學校와 國際勞動機構의 立場은 再分配의 成長을 貧困의 제거에 크게 寄與하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世界銀行-「씨섹스」大學校 研究에서 擬態分析(simulation)한 결과 貧困階層에 대한 消費的 移轉支出과 賃金水準의 抑制보다 貧困階層에 대한 投資移轉支出의 成長과 衡平의 調和에 有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政策手段으로서는 成長過程에 결친 人的·物的 資產의 漸進的 再分配와 人的資本 形成의 手段으로서 教育 및 保健서비스의 普及과 綜合的 農村開發에 대한 財源配分 등을 중요시하는 반면 相對要素價格과 價格構造의 變화를 통한 雇傭機會의 創出 또는 勞動力 需要의 增大 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立場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國際勞動機構는 建設分野에 있어서 勞動의 代替需要增加의 가능성에 樂觀的인 立場이다.

이상과 같은 再分配와 衡平을 造成하는 政策이 그 實效를 거두기 위하여 「아델만」과 「모리스」는 發展에 대한 高位政策當局의 決意(leadership commitment to development)와 發展展望을 주요시하는 반면 世界銀行-「씨섹스」大學校와 世界勞動機構는 利害集團에 영향을 받지 않는 政治體制와 效率的行政體系와 國民 대다수 特히 貧困階層의 參與(mass participation by the poverty groups)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한다. 특히 世界銀行-「씨섹스」大學校의 報告書는 印度의 事例를 들어 中央政府와 地方政府에 대하여 既存利害集團의

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救貧事業이 목적하는 바의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Chenery, et al., pp. 261~262).

이와 같이 볼 때 成長을 통한 再分配는 플라톤主義(Platonism)를 信奉하고 實踐하는 政策立案者와 執行者에 의하여 成長過程을 통하여 土地改革과 같은 物的 資產의 직접적인 再分配와 低所得階層을 위한 각종 支援과 人的 資本形成으로써 가능하다고 하겠다. 불행히도 오늘날 世界의 많은 開發途上國, 특히 人口의 규모가 큰 後進國에 있어서 첫째, 成長 自體가 이루어지지 않고 둘째, 再分配政策을 성실히遂行할 수 있는 行政體制의 確立이라는 전제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成長을 통한 再分配政策은 第3世界에 弥漫한 低所得과 貧困의 問題를 解消하는 데 무력하다는 結論에 이르고, 여기에 새로운 戰略으로서 최근 들어 擡頭되고 있는 것이 基本生活要件의 充足(meeting basic needs)이다.

### III. 開發戰略으로서 基本生活要件의 充足

四半世紀에 걸친 오랜 經濟開發의 努力은 예외적인 몇몇 나라에 성공적인 經濟發展을 가져다 주었으나 전세계 인구의 과반수인 第3世界의 대부분의 국가, 특히 人口가 많은 開發途上國에 남겨준 것은 「추악한 현실과 精巧한 模型」(ugly facts and fancy models) 뿐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K. Griffin and A.R. Khan, 1978). 韓國, 自由中國, 싱가포르, 홍콩 등 성공적인 經濟的 跳躍을 이루한

몇개의 群小國家를 제외하고 經濟成長自體가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국가에 있어서 扈傭創出을 통한 成長이나 成長을 통한 再分配는 큰 意味를 갖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人間의 最低生活水準 以下의 貧困에서 허덕이는 오늘날 대다수의 人類를 위하여 直接的인 開發戰略의 代案을追求하기에 이르렀고 1976年을 전후하여 國際勞動機構를 비롯한 國際機關에서 새로운 開發戰略으로서 形성되기 시작한 것이 基本生活要件의 開發戰略(basic needs strategy) 또는 그 接近方法(basic needs approach)이다(이하의 本文에서부터는 BN戰略 또는 BN接近方法으로 略稱하기로 한다.)

#### 1. 戰略의 意義

BN戰略의 主唱者의 한사람인 「P.스트리튼」은 基本生活要件의 特징에서 출발하여 종래의 開發戰略을 補完하는 戰略으로서 이 戰略을 제시한 바, 이는 基本生活要件을 이루는 特수한 資源이 결여된 特殊계층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配分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Paul Streeten, 1977, pp. 8~9), 그러므로 BN戰略에서는 所得 그 자체보다 配分된 것의 特性에 力點을 두고 貧困의 제거나 失業의 減少, 또는 下位 40% 低所得階層의 所得增加 등과 같은 종래의 政策目標를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接近方法은 광범위한 목표의 手段이 되는 生產性이나 生產과 成長 등의 概念을 代替하는 것이 아니라 人類의 기본적 諸요를 감안하여 產出物의 構成, 構成部門의 成長率 및 購買力의 分布 등을 변화시킬 필요성을 強調하고 있다.

基本生活要件의 定義는 주어진 社會의 주위

환경, 기후, 發展段階, 문화적 多樣性,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 概念이다. 또한 基本生活要件은 生存의 形態가 단순한 것(bare survival)이냐 계속적(continuired)이냐 또는 生產的(productive)이냐에 따라, 또한 物質的인 것에 국한하느냐 또는 非物質的인 것까지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그 定義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基本生活要件을 定義하는데 있어서 論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크게 나누면 狹意와 廣意로 구분된다. 狹意의 基本生活要件은 ①正常活動에 필요한 成人 1日기준 2,350 칼로리 내외의 食物, ②食用으로서의 質的要件을 갖추고 인근에서 확보될 수 있는 食水, ③母子保健, 기초적인 衛生 및 營養教育, 家族計劃 등을 포함한 기본적 保健 서비스, ④社會的으로 容認되는 최저수준의 영구적 居處로서의 住居, ⑤成人文盲者까지 그 對象으로 한 基礎敎育 등이다<sup>5)</sup>.

基本生活要件을 廣意로 規定하는 論據는 非物質要件이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物質的要件을 充足시키는데 중요한 條件이 되기 때문이다. 非物質的要件으로서 自決, 自立, 政治的自由와 保障, 決定過程에의 國民參與, 國家의 文化的同一性, 삶과 일에 대한 目的意識 등이다(Streeten, 1977, p. 9). 이렇게 광범위한 基本生活要件의 規定은 어떤 要件이 다른 要件를 規定하는데 補完的일 수 있으나 때로는 相衝的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든 要件를 일시에 충족시킬 수 없다면 이에 따른 要件間의 優先順位와 位階(hierarchy)가

形成된다. 여기에 對象人口로서 失業者와 不完全就業者는 물론 老人, 病者, 不具者, 孤兒 등 就業不可能者(the unemployable)까지 포함하면 이 接近方法의 全體를 이루는 基本要件은 매우 多樣하고 一律的으로 規定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 2. 開發戰略으로서의 特徵

基本生活要件의 接近方法은前述한 바와 같이 이미 이용되어 온 貧困除去 또는 扉墉增進을 위한 開發戰略에 대한 代案이 아니라 그러한 戰略의 延長 또는 進展된 形態이다. 그러나 이 接近方法은 다음과 같은 고유한 일곱 가지 특징을 지님으로써 다른 開發戰略과 區分된다(Streeten and Burki, 1978, pp. 413~414). 첫째, BN戰略은 가장 貧困한 階層의 특정한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높은 優先順位 또는 加重值를 두되 生產性을增進시키는 목적으로 보다는 필요의 충족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의 充足過程에서 生產性의增進이 수반되긴 하지만 後者를 유일한 성과의 判斷基準으로 보지는 않는다. 둘째, 이 戰略은各國에서의 경향으로 보아 절대적인 缺乏을 제거하는 努力에 가장 큰 力點을 두며 絶對貧困이 密集된 社會일수록 이 接近方法의 필요성은 正比例한다. 세째, 이 接近方法은 특히 轉換期에 있어서 貧困階層의所得增加가 그들이 購入하는 物品과 서비스의 價格上昇으로, 또는 그들의 生產性의增加가 低賃金으로相殺되지 않도록 供給管理(supply management)를 강조한다. 따라서 基本生活要件의 목표는 단순한 희망적 消費水準이 아니라 生產構造와 그 成長이 貧困階層에 有利하도록構

5) 「학」(Hag)은 이러한 여러 기본적인 要件이 充足되지 못한 世界人口를 第1要件에 9.3億, 第2要件에 12億, 나머지 要件에 각각 8億으로 推定하고 있다(Mahbub ul Hag, 1978, pp. 37~38).

造的變化를 誘導하는 政策의 意味를 함축한다<sup>6)</sup>. 再체로 BN의 接近方法에 의하여 生產構造를 再編成하는 과정에서 生產者로서의 政府役割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既存하는 不完全競爭狀態의 市場에서 불평등한所得分配下에 消費者選好에 反應하게 放任하기보다는 基本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菲요에 따라 基本生活要件을 이루는 財貨와 서비스에 대한 公共部門의 供給力を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이 接近方法의 가장 특이하고 어려운 問題는 定義上 또는 財源調達上의 問題가 아니라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이 共存하는 가운데 기본적인 菲요의 近接性을 높이는 傳達體系(delivery system)를 갖추는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問題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制度的 構造의 分析과 改善이 뛰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다섯째, 基本生活要件은 때로는 商品이나 價格이 아닌 그 屬性으로 定義되기도 한다. 바꾸어 말하면 食品으로서 米穀이나 그 價格이 아닌 烘量과 營養分으로 評價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商品이나 그 價格에 의한 評價는 그 屬性으로 評價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sup>7)</sup>. 여섯째, 基本生活要件의 戰略은 오늘날 混合經濟體制를 지향하는 開發途上國이 채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間接稅, 食糧支

給, 社會서비스 供給, 廣告制限 등을 통한 消費者需要에 대한 選別的 規制를 내포한다. 이러한 消費需要의 選別的 規制는 주어진 資源으로서 低所得과 貧困階層의 기본적 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資源의 再配分을 위한 誘引政策이 되며 주어진所得分配狀態에서 誘發되는 有效需要에迎合하는 市場機能의 調整을意味하고 있다.

끝으로前述한 바와 같이 立場에 따라 基本生活要件은 物質的인 것뿐만 아니라 非物質的인 것까지 포함하며, 後者の 要件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經濟的側面의 改善은 물론 動機의 賦與와 制度的改善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上述한 것은 基本生活要件의 충족을 위한 戰略과 接近方法이 지니는 特성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特징은 BN戰略이 지니는 고유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戰略 자체가 力點을 두는 것으로 세계 각처의 開發途上國에서 오늘 날까지 試圖되었던 經濟成長 또는 成長을 통한 再分配를 위한 開發戰略이 크게 實效를 거두지 못하였던 第3世界의 경験에서 自然發生的으로 進化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새로운 開發戰略은 아직도 그 體系를 形成해 나가는 過程에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3. 問題點과 研究課題

어떤 새로운 着眼點에서 출발하여 政策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는 크고 작은 問題點이 뒤따르며 그 形成過程에 있는 基本生活要件의 開發戰略도 그 예외는 아니다. 여러가지의 問題點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들어 檢討해 보면 우선 이 開發戰略에서 基本生活要件을 무

6) 이 특징을 발견시켜 「슈베펠」은 새로운 투자배분기준과 투자심사기준으로서 生產物配分經路分析(product path analysis)을 발견시킨 바 있다. 자세한 것은 Detlef Schwefel, *Basic Needs: Planning and Evaluation*, Berlin,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1978 참조.

7) 좀더 구체적인 事例로서 이론과 專門醫에 의한 1차진료와 保健要員에 의한 1차진료를 들 수 있다. 前者の GNP 寄與率은 대단히 높고 고급서비스로 간주될 수 있으나 1차진료에 해당하는 질병의 치료라는 관점에서 그 屬性上의 큰 차이가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엇으로 定義하느냐 하는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狹意로 定義한다 하여도 基本生活要件은 發展段階에 相應한 適切한 食物과 食水, 基本적 保健서비스, 住居, 基礎教育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食物과 食水는 비교적 規定하기 쉬우나 기본적 保健서비스를 구성하는 1次診療는 靜態的으로나마 規定하기 대단히 어렵다. 動態的으로 이러한 要件을 충족시키는 施設은 懷妊期間과 壽命이 길고 또 投資의 不可分性(indivisibility) 때문에 많은 경우 漸進的改善을 추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며, 이에 따라 所要財源의 규모는 엄청나게 를 가능성이 있다. 또한 發展段階에 相應한 基本生活要件이란 좋은 着想이긴 하지만 가령 우리나라의 發展段階에 相應한 기본적 住居要件을 구체적으로 面積, 利用資材, 施設 등으로 規定한다고 할 경우 그 解答을 얻기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基本生活要件을 광범위하게 規定하여 精神的 心理的 次元에까지 擴大하여 보면 社會科學의 現發展狀態로 보아 어려움은 더욱 加重하게 된다. 非物質的 基本要件을 뚜렷이 무엇이라고 열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計量化하거나 政策變數로서 제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것은 60年代後半부터 研究가 거듭되어 오고 있는 世界的인 社會指標運動을 통하여 痛感하여 온 바이다. 불완전하나마 概略的인 基本生活要件을 規定하는 데 있어서 社會指標體系를 全體集合

8) 가령 어떠한 社會指標體系에도 건강은 반드시 포함되나 아직도 건강에 대한 實用的 개념이 定立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를 나타내는 사회지표가 설득력있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어떤 社會指標體系에서는 非物質의 基本生活要件을 포함시킨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代變數로서 간접적 部分的 指標일 뿐이고 직접적으로 모든 要件을 내포하는 指標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으로 본다면 基本生活要件은 그 部分集合(sub-set)이라고 規定할 수 있다. 要件 하나하나에 대한 有用한(workable) 概念의 定立은 해당분야 專門家들에 의해 앞으로 연구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sup>8)</sup>.

基本生活要件을 規定하는 方法으로서는 國民의 參與(popular participation)를 활발히 하여 기본적 필요를 自主的으로 결정하고 自立의 努力으로써 이를 충족시키려는 方案이 제시되고 있으나 과연 그들의 필요를 貧困階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의문스럽다. 반면 第3者가 결정하여 줄 때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自發的 努力과 參與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스러운 바가 많다. 따라서 上述한 代案은 하나 하나가 각기 長短點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狀況에 따라 지닌 長點을 잘 살릴 수 있는 方法을 選別的으로 活用해야 될 것이다.

둘째로, 어떤 基本生活要件이 規定되었다고前提하면 基本要件의 性格上 公共部門, 民間部門 또는 두 部門에서 같이 供給되어야 하는데 이 供給體系(delivery system)를 어떻게 設定하여야 對象人口인 貧困階層에 혜택을 주느냐 하는 問題이다. 「스트리튼」(Streeten, 1979, pp. 26~28)도 지적한 바와 같이 財力과 影響力이 불평등하게 分布된 社會에 있어서 基本生活要件의 供給體系는 「리 차타리어의 法則」(Le Chaterlier's principle)의 영향으로 對象된 階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始發點의 균형으로 還元되는 경향이 있다. 그 예로서 英國에서 1944年에 制定된 「버틀러」敎育法(Butler Education Act)은 有資格한 모든 國民에게 無償으로 高等敎育의 機會를 제공하고 있으나 오늘날 英國의 高等敎育은 中產階層의

獨占物이 되어 低所得層의 子女로서 「옥스포드」(Oxford)大學校에 在學하고 있는 學生은 戰前에 비하여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칠레에서도 住宅建設을 促進하기 위하여 自家所有의  $\frac{1}{4}$ 에 대하여 低利融資의 形태로서 補助金을 주고 있으나 이 制度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擔保가 있고 銀行에서 融資받을 수 있는 階層이다. 이러한 事例는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허다하다.

따라서 民間部門이 市場原則에 입각하여 生產·配分하는 生活의 기본적 財貨와 서비스는 고사하고 최소한 基本生活要件 가운데 政府部門이 供給하는 社會서비스에 대하여는 그 供給物量의 增加뿐만 아니라 供給體系도 改編하여 對象人口인 貧困階層이 享有할 수 있게 여러가지 政策과, 필요에 따라서는 政治的·經濟的 影響力を 平準化하는데 有效한 政策을 講究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國民의 基本生活要件을 構成하는 財貨와 서비스 가운데 民間部門에서 供給되거나 두 部門에서 供給되고 있을 때 地域의으로 分散되어 있는 貧困階層의 필요를 총족시키기 위하여 公共部門의 規模를 어느 정도 擴大하고 두 部門의 機能을 어떻게 調整할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檢討對象이라고 하겠다.

세째로, 中래의 開發戰略에서는 企劃當局과 企業의 역할이 두드러졌으나 基本生活要件의 開發戰略에서는 企劃當局과 企業의 역할은 물론 基本生活要件을 享有하는 國民, 특히 戰略의 重點對象이 되는 貧困階層의 參與(popular participation)가 대단히 重要視되며 따라서 中央政府, 地方政府 및 地域單位 住民의 權限을 어떻게 規定하는가 하는 問題가 뒤따르게 된다. 基本生活要件이 총족되지 않은 階層이 地

域의으로 分散되어 있고 地域社會의 여건이 각각 다른 狀況 아래 中央政府의 企劃當局의 일률적인 計劃作成과 그 執行에는 한계성이 있으며 效率性을 높이기 위하여는 최소한 菲요의 인식과 先制的 主導는 地域社會가 담당하는 地方分權化(decentralization)가 더욱 절실하고 中央政府는 그러한 菲요의 총족을 원활히하기 위한 人力養成과 財政的 支援 등 간접적인 支援을 中央集權化하여 담당할 것이 권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 開發戰略의 特징을 살리기 위한 中央集權的 意思決定과 地方分權의 意思決定間에, 또한 行政體系·指導力·伸縮性·委任間의 調和가 세로운 形態로서 摸索되어야 한다.

네째로, 基本生活要件이 갖는 相互關聯性에 비추어 어떤 生活要件을 어떻게 結合하여 총족시키느냐, 또는 어떤 順序로서 充足시키느냐에 따라 目的하는 바 單位當 費用의 節減과 政策效果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며, 때로는 政策目標間의 相衝關係가 성립하기도 하는데 이에 어떠한 合理性을 기준으로 어떻게 調和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近年에 營養—保健—家族計劃間, 教育—衛生—營養—保健間, 住居—衛生—保健間 등의 관련성을 중요시하는 學界의 傾向에 비추어 이러한 要件의 戰略的相互補完性(complementarities)과 關聯性(linkages)을 活用하여 단계적으로 基本生活要件의 構成이 변화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이 開發戰略의 政策的 努力의 最低線(critical minimum effort)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분명한 實證的 규명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政策目標間의 相衝關係를 例示하면, 保健·衛生의 改善은 中·短期의으로 平均壽命의 延

長과 人口增加率의 上昇을 가져와 같은 期間의 人口增加의 抑制라는 政策目標와 相反되며, 長期的으로 人口增加率이 鈍化될 때까지 그 많은 國民에게 무슨 財源으로 基本生活要件을 충족시키느냐 하는 問題가 야기된다. 더욱 어려운 것은 先進諸國의 生活保護法을 통한 經驗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支給額을 더 받기 위하여 貧困階層의 出產率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아 基本要件의 충족이 人口增加率을 높이는 副作用을 誘發할 가능성도 있다.

끝으로 基本生活要件의 充足을 위한 戰略은 상당한 水準의 混合經濟體制를前提하는 바이러한 體制 아래 個人의 成就動機에 대한 补償制度(incentive system)를 어떻게 定立하느냐 하는 問題가 있다. 理論的으로는 失業者 및 不完全雇傭者와 就業不可能者를 포괄하여 가장 貧困한 階層을 이 戰略의 對象人口로 삼는다고 하지만 설정된 貧困線 이하의 階層에 대한 基本生活要件의 충족은 貧困階層과 貧困線帶階層의 成就動機에 부정적 影響을 줄 것은 명백하다. 다시 말하면 基本生活要件 充足의 開發戰略은 과거의 成長實績이 미미하였기 때문에 적절적으로 貧困問題를 解消함으로써, 低成長 가운데 國民福祉函數를 極大化하려는 試圖이지 이 戰略이 成長을 促進하거나 또는 成長을 促進하는 개인의 創意와 成就動機를 高吹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불분명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 戰略은 成長政策과 동시에 追求되지 않으면 低生產水準에서의 停滯的 效用의 극대화, 즉, 스리랑카와 같은 衡平 가운데 침체된 發展狀態를 탈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教育·住宅·保健 등등에 대한 支出이 수단과 동시에 目적이라는 經濟發展 또는 發展의 兩面性 가운데(B. Higgins, 1963)

前者를 경시하고 後者를 중시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고 成長과 發展을 주도하는 國民의 成就意慾과 動機賦與에 대하여서는 善行하는 「사마리아」人의 立場에서 지나치게 樂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V. 우리에게 주는 教訓

上述한 바와 같은 成長을 통한 再分配와 基本生活要件의 충족이라는 開發戰略의 力點轉換은 여려 開發途上國들의 과거 20餘年間의 歷史的 經驗 가운데 經濟成長을 위한 不斷한 노력이 시도되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팽배한 大衆貧困現象이라는 共通性(uniformity)에서 출발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代案으로서 摸索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進化過程을 거친 開發戰略을 어느 特定한 經濟社會의 開發戰略으로서 채택하거나 教訓으로 받아들이고자 할 때 各國이 지닌 與件과 特殊性의 차이에서 오는 發展問題의 複雜性(complexity)이 혼히 등한시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성급한 자세는 試行錯誤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他山之石을 구하는데 있어서 크게 警戒되어야 한다. 이러한 開發戰略의 새로운 流行은 70年代初의 「成長을 통한 再分配」에서 70年代後半의 「基本生活要件의 충족」으로 進化되는 過程에 있으나 새로운 것에 敏感하기에 앞서 우리 風土에 비추어 이러한 戰略이 얼마나 妥當性을 지니고 있는가를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1. 再分配와 基本生活要件의 兩立性

60年代初에서 비롯한 우리 經濟의 高度成長 實績으로 보아 BN戰略은 이 戰略自體가 상대적인 低成長國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點에서 從來에 追求하여 온 우리의 高度成長의 開發戰略과 代替될 수 없으나 成長을 통한 再分配와 福祉國家의 理念을 效率的으로 실현한다는 觀點에서 補完的 戰略으로 援用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BN戰略을 高度成長下의 補完的戰略으로 보고 所得分配와 再分配에 있어서 所得概念을 修正하면 成長을 통한 再分配와 基本要件의 총족은 統合(synthesize)될 수 있는 戰略이다. 成長을 통한 再分配에서 그 客體가 되는 所得을 生活水準을 나타내는 實質所得으로 보면(朱鶴中, 1979, pp. 35~37) BN接近方法을 통한 基本生活要件의 총족은 그 階層의 所得으로써 換價, 加算되어야 하고, 歸屬된 換價額은 生活水準을 나타내는 所得의 實質的 再分配이다. 특히 低所得階層과 貧困階層의 基本生活要件의 充足은 이 階層의 所得分配率을 增加시키는 바 이는 所得分配를 改善하는 가장 效率的인 方法이다.

「成長을 통한 再分配」의 實效가 없으므로 마치 「基本生活要件의 총족」이 貧困問題를 칙접적으로 다룬다는 後者의 立場은 前者의 所得分配와 再分配에 관한 研究가 마치 所得의 階層別 分布 그 자체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데서 起因하는 것 같다. 그러나 分配研究의 궁극적 目적은 階層別 福祉水準 또는 生活水準의 分布를 규명하는 데 있으므로 兩者間의 관계성은 분명하게 부각된다. 所得의 概念을 生活所得이나 福祉所得으로 擴大 解析하면 基

本生活要件의 開發戰略은 대단히 中요한 所得의 分配 및 再分配의 手段이 되고 이에 成長이 수반되면 基本生活要件 그 자체를 漸進的으로 擴大하여 國民福祉水準의 向上을 더욱 기할 수 있다.

## 2. 再分配의 政策方向

전통적 의미의 所得分配와 再分配의 改善은 富와 資產의 再分配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結論은 60年代初의 高度成長과 이의 뒷받침을 위한 人的·物的 富의 축적을 이룩한 우리 經濟가 衡平과 成長의 調和를 追求하는 데 있어서 극복하여야 할 가장 큰 政策課題로서 示唆하는 바 크다. 發展初期와 高度成長過程에 있어서 우리가 分配上 上대적 衡平을 유지할 수 있었던 中요한 原因의 하나는 解放以後 60年代初까지의 여러가지 歷史的 要因과 政策으로 인하여 外國에 비해 富의 集中度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H. Choo, 1975). 그러나 1970年 以後 民間貯蓄率이 10%를 上廻하였고 1974年 이후에는 15%(1976年 제외)이 되었으며 不動產價格이 急騰하는 오늘날 資產이 어느 所得階層에 의하여 形成蓄積되는가 하는 것은 오늘과 내일의 所得分配 決定要因으로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또한 이 分野에 대한 체계적인 研究는 이루 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언은 할 수 없으나 韓國의 現실 아래生涯所得에 中요한 決定要因을 이루는 大學教育을 통한 人的資本 形成도 이에 소요되는 正規 및 非正規教育費用의 負擔과 심한 入學競爭으로 미루어 低所得階層에게 漸進的으로 機會가 制約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人的資本과 物的資產의

交互作用이所得分配에 逆進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할 것으로 본다. 여기에 加勢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二重金利構造와 한정된 銀行金融 및 外資導入으로서 이러한 惠澤에서 상대적으로 疏外되는 中小企業家나 零細業者에 비하여 大企業家의 位置는 더욱 유리하게 되어 後者의 富의 蓄積은 加速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成長을 통한 再分配를 實效있게達成하기 위한 長期的인 政策手段으로서 人的資本과 物的資產의 分布를 改善하는 方案이 講求되어 低所得階層에 대한 高等教育機會의 擴大, 銀行貸出資金의 衡平造成的 配分, 勤勞者財產形成制度의 強化, 相續稅 및 贈與稅의 資產再分配機能의 強化, 資本利得 및 不當利得에 대한 重課 등 政策이 실효있게 追求되어야 한다. 주어진 人口의 年齡構造 아래 增加될 經濟活動人口를 吸收하기 위하여 지속적 高度成長이 불가결한 要件이고 高度成長을 지속하기 위한 人的資本과 物的資產의 형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나 이러한 과정에서 人的資本과 物的資產의 형성이 中產以下의 階層에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政策的 配慮가 뒤따를 것으로써 衡平이 沮害되지 않도록 留意되어야 하겠다.

### 3. 基本生活要件의 韓國의 意義

近 20年間에 결친 우리의 高度成長過程에서 國民生活의 많은 基本要件은 成長과 더불어 총족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 制

9) 「코나이」가 지적한 바와 같이 急成長 가운데 犠牲(sacrifice)으로서 끝나는 部門은 度外視하더라도 等閑視(neglect)와 延期(postponement)의 부작용이 뒤따르는 분야에 대하여는 經濟力의 伸張과 더불어 相應한量의 投資가 뒤따라야 한다.

約, 특히 可用財源의 制約 가운데 輸出主導型工業化的 開發戰略을 追求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國民生活要件을 構成하는 財貨와 서비스의 生產이 다소 등한시되었고 保健, 上·下水道, 圖書館, 餘暇善用施設, 社會서비스 등의 여러 部門에 있어서 우리의 賦存資源과 發展段階에 비추어 그 供給이 대단히 不足한 상태이다. 가령, 公共部門으로서 公認되고 있는 保健醫療에서 많은 遊休醫療人力을 지니고 人力輸出을 하면서도 一般國民에게 經濟的 負擔이 과중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믿고 治療받을 수 있는 醫療供給體制가 確立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현행 醫療保險制度의 근본적인 修正이 없이는 그러한 制度的 危險分散을 가장 필요로 하는 國民의 過半數인 農民, 中小 및 零細企業從事者, 零細自營業者 및 그 扶養家族은 保護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中進國의 國民所得水準을 이룬 오늘날 大都市의 道路鋪裝率을 높이는 努力은 우선시 되고 있으나 그 人口規模로 보아 先進國의 都市가 될 수 있는 人口密集地域에도 上水道施設이 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거의 모든 住居地域에서 家口마다 昇壓器를 달아야 家電用品을 사용할 수 있는 送配電施設이나, 몇 시간씩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는 國公立圖書館施設의 부족이나, 中產層이라도 여름철에 자녀들을 市內水泳場에 보내는데 經濟的 負擔을 느껴야 하고 一般國民이 供給不足과 不當價格에 시달려야 하는 餘暇善用施設의 現況 등은 發展의 均衡과 調和라는 관점에서 再檢討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急成長對 조화된成長(rush versus harmonic growth)의 功過를 再檢討하고<sup>9)</sup> 基本生活要件의 開發戰略이 제시하고 있는 供給管理(supply management)

로서 基本生活用品과 서비스의 供給擴大와 價格安定이 보다 優先되어야 하겠다. 만약 可用財源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展示的인 奢侈性消費에 대한 抑制나 불건전한 消費形態를 선도하는 消費管理(demand management)를 통하여서도 필요하고, 건전한 一般國民의 기본적 生活需要는 충족되어야 하겠다<sup>10)</sup>.

#### 4. 貧困階層의 保護

오늘날까지 政府主導型 高度成長에 注力하는 과정에서, 어느 社會나 존재하는 貧困階層과 이 階層의 基本生活要件의 충족에 政策的配慮가 未盡하였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고, 이 階層의 問題를 해결하려는 基盤造成마저도 未備한 현실이다. 물론 이러한 階層이 自力・自活할 수 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으나 不可抗力의으로 自力更生이 불가능한 階層이나 自活하려는 階層에 대한 政府의 支援은 다른 政策事業에 비하여 지나치게 인색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도 작은 社會保障費 가운데 주된 豫算項目은 產災保險과 公務員, 軍人, 私立學校教員年金이고 貧困階層의 生活保護가 목적인 公的扶助에 대하여는 主務部署의 統計年報에 公表되지 않을 정도로 미흡한 狀態이다. 물론 自主國防과 先成長一後福祉의 國民的合意에 따라 發展初期에 있어서는 貧困階層의 生活保護에 대한 財源分配은 優先順位가 낮았다는 것은 인정하나 近20年間의 高度成長으로 中進國의 所得水準이 된 오

늘날 中央政府支出 總計 중에서 援護轉出金이 1%에 미달되고 公的 扶助는 그중의 몇割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친 看過과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우리가 看過하였던 貧困階層의 生活保護를 擴大해 나가는데 있어서 基本生活要件의 충족은 輸出主導型 工業化戰略을 補完하는 戰略으로서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이 戰略이 제시하고 있는 效果적인 供給體系의 確立과 受惠者的의 자발적 참여 등의 配慮事項은 이 特殊階層의 基本生活要件을 충족하는 政策展開에 좋은 參考資料가 될 것으로 믿는다.

#### 5. 輸出政策에 대한 反省

成長을 통한 再分配의 開發戰略이 지니는 하나의 큰 취약점으로서 지적되는 것은 分配問題를 國內問題로서 국한시키고 國家間의 再分配가 度外視되었다는 사실이다. 「랄」이 지적한 바와 같이(Lal, 1976, p. 733) 開發途上國의 高位層 官吏보다 훨씬 높은 水準의 紙與를 받는 國際機關의 專門家가 再分配의 倫理를 설명하고 分配形態를 改善하기 위하여 그 官吏의 所得增加가 억제되고 所得再分配政策이 강력히 展開되어야 할 것을 助言하는 모순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現象은 하나의 「아이러니」로서 衡平의 根本原則의 問題로서 검토되어야 한다. 사실상 國家間의 國際的 再分配는 南北問題와 新國際經濟秩序(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의 確立과 관련하여 論議되고 있는 하나의 큰 懸案問題이나 아직도 先・後進國間에 만족할 만한 實效있는 國際的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矛盾과 관련하여 海外依存度가 높은

10) 예를 들면 근래에 도입된 쿨택시는 消費管理와 生活要件의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옳지 못하고, 座席비스制度는 좋은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前者の 財源으로 後者를,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일반택시를增車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經濟가 輸出振興에 있어서 輸出入國間의 실질적인 所得再分配를 지나치게 不利하게 하지 않도록 警戒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즉, 지나친 低賃加工輸出이나 國內價格과 輸出價格間의 乖離는 低賃勤勞者나 國內消費者의 犠牲으로서 海外消費者의 實質所得增大效果를 가져다 주는 國際間의 衡平問題를 야기시키고 있다. 현실적으로 資材輸入, 元利金償還을 위한 外貨稼得과 輸出에 의한 雇傭增進 등의 得을 國內物價에 轉嫁, 그 上昇을 통

한 所得分配上의 失에 비교하는 면밀한 검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기에 輸出主導型成長과 經濟安定의 得失關係 내지는 이러한 成長과 衡平의 相衝關係가 成立한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나라 國民經濟의 現發展段階와 예상되는 계속적인 輸出主導型 高度成長戰略에 비추어 점차 중요한 政策課題로 浮刻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政策的 配慮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 參 考 文 獻 ◇

- 徐相穆, 「貧困人口의 推計와 屬性分析」, 『韓國開發研究』, 1979, 여름호.
- 朱鶴中, 「所得分配研究에 있어서 所得의 概念과 決定要因」, 朱鶴中編,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1979.
- Adelman, Irma and C.T. Morris, *Economic Growth and Social Equity in Developing Countrie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3.
- Bhagwati, Jagdish, *The Economics of Under-developed Countries*, Weidenfeld & Nicolson, 1966.
- Burki, S.J. & Paul Streetn, "Basic Needs : Some Issues", *World Development*, Vol. VI, No. 3, 1978.
- Chenery, H.B. (ed.), *Studies in Development Planning*,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 Chenery, H.B., et al., *Redistribution with Growth*,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 Choo, H., "Some Sources of Relative Equity in Korean Income Distribution : A Historical Perspective", JERC-CAMS, In-

*come Distribution, Employ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east and East Asia*, Vol. I, 1975.

- Griffin, Keith and A.R. Khan, "Poverty in the Third World : Ugly Facts and Fancy Models", *World Development*, Vol. VI, No. 3, 1978.
- Hag, Mahbub ul, "Crisis in Development Strategies", *World Development*, Vol. I, No. 7, 1973.

\_\_\_\_\_, "A Third World View", *Economic Impact*, March 1978.

- Higgins, Benjamin, "An Economist's View", UNESCO, *Social Aspects of Economic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1963.

Hirschman, A.O., "Changing Tolerance for Inequality in Development",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November 1973.

- ILO, *Employment, Growth and Basic Needs*, ILO, 1976.

Kornai, J., *Rush vs. Harmonic Growth : Meditation on the Theory and the Policies of Economic Growth*, North Holland,

1972.

- Lal, Deepak,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 A Review Article", *World Development*, Vol. IV, No. 9, 1976.
- Papanek, G.F., *Pakistan's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 Schwefel, Detlef, *Basic Needs: Planning and Evaluation*, German Development Insti-

tute, 1978.

- Streeten, Paul, "The Distinctive Features of a Basic Needs Approach to Develop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Review*, March 1977.
- \_\_\_\_\_, "From Growth to Basic Needs", (unpublished paper), 1979.